

# 12·3 불법계엄 1년… 민주 이원택 의원, 비전 발표 “전북자치도민 주권정부 열어 갈 것”

“도민들의 ‘주권’ 가치  
전북자치도정으로 확장  
제2계엄 지시거부 조례  
도민 도정 참여 제도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1년 전 목숨 걸고 지켜낸 도민들의 ‘주권’의 가치를 전북도정으로 확장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시대에 맞춰 전북 도정에 주권자의 의지를 담은 도민 주권정부를 열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2일,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전북도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1년 전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울타리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고, ‘도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향후 제2, 제3의 계엄 시도가 있을 경우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주헌정 수호 조례(가칭)’를 제정하고, 도의 운영 방향과 정책을 정할때 도민 참여 결정 구조를 운영하는 두가지 방향에서 도민 주권정부를 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과 관련해 이 의원은 우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가장 어두운 밤으로 기록된 이날 비상계엄 내란 사태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최후의 보루는 헌법에 가슴에 품은 국민이었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게 평가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1주기'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어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양심적 군인들, 김동연 지사, 강기정 시장을 포함한 전국의 양심적 선출직 공직자들이 끝까지 싸워 주신 덕분에 민주주의는 다시 숨 쉴 수 있게 됐다”고 술회했다.

나아가 “도의 운영 방향과 정책에서 도민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정책의 주인공이어야 하며, 길거리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도민들의 손에 이제 ‘도정의 마이크’를 쥐어드릴 것”이라며 도민 주권시대를 예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민주헌정 수호 조례(가칭)의 경우 또다시 계엄 시도가 있을 경우 전북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

시에 당연히 저항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받게 핵심”이라고 내놓았다.

도민들의 도정참여의 경우 “도민정책사회적대화 추진단을 만들어 도민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정책플랫폼으로 운영하며, 청년 체류조건·지역 일자리·마을경제·산업전환 등과 같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선정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 주도형 프로젝트 공모제로써 도민이 직접 지역 의제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도민심사단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 민관이 함께 협력해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갈등과 대립, 해제의 현장을 물론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도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는 선출직 공직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일깨워준 순간이었으며, 저는 다시 그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 대처법 제 목숨을 걸고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전북도청이 되도록, 도지사로서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법무부 조사보고서, 수원지검 술 제공 등 공모 가능성 ‘크다’”

민주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 요약본 공개

지난 9월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술 파티 의혹’ 조사 결과, 검찰청 조사실 안에서 피의자와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 회덮밥 등이 제공됐고, 불투명 물병에 소주를 담아 종이컵에 따라 마신 것으로 기록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위는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 조사보고서 전문 및 별첨 자료 공개, 이화영 위증 사건 공소 취하를 요구했다.

특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휴일 조사 때 육회덮밥·갈비탕·초밥 등 외부 고급 도시락이 반복 제공됐으며, 보고서는 “휴일 조사 시 제공된 도시락은 생방송에서 계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특위는 이에 대해 “검찰 조사실이 사실상 VIP 점점실처럼 운영된 정황”이라고 평가했다.

조사팀은 ‘진술세미나’의 존재도 사실상 인정했다. 보고서에는 공범들을 1313호 영상녹화실 등 참고형 공간에 함께 모아두고, 담당 검사가 자리를

비우면 공범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도록 방치한 진술이 기재돼 있다. 특위는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맞춰내는 구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 상주하며 사실상 수형비서처럼 움직였다는 고도판 진술도 있었고, 선임계조차 없는 변호사들이 수형자를 자유롭게 만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위는 특히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불법 상태에서 검찰 고위층과의 연결을 운운하며 피의자에게 거래성 발언을 한 정황도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결론에서 “1313호에서 이루어진 각종 관행이 피의자·참고인의 인권 보장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며, 외부 도시락·주류 제공, 공범 대질·진술 구조, 변호사 점견 관행 등이 추가 감찰 또는 수사를 통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특위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남긴 공식 문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핵심 진술과 일치한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의 위법·부당 수사 관행이 드러난 만큼, 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현장실습장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즉시보고 의무화

민주 윤준병 의원, ‘한농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2일, 한국농수산대학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농수산대학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이 ‘교육을 빙자한 위험노동’으로 변질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일환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실습장 대표자는 신속하게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이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보고를 받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현황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도록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축!전주매일 창간

www.sgcenergy.co.kr

### 자원순환형 에너지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세상

Sustain Grow Change

SGC에너지는 고품질의 중기 및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입니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바이오매스 에너지 확대, 탄소제로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밸류 체인(Value Chain)을 구축하여 'Clean Energy'를 제공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ESG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Sustain) 성장(Grow)과 변화(Change)를 이루겠습니다.

**SGC 에너지**

SGC 이태크건설

SGC 송루선

SGC 그린파워

SGC 다영플랜트

SGC 퍼트너스

## 도의회 농복환위, 전북 재정 진단·대안 모색 특강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현황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나리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청해 전주시의 재정 악화 원인과 개선 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주영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재정의 구조적 왜곡과 시민 참여 부재가 문제”라며 전시장·선심성 사업 축소, 불용예산 점검, 시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재정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한 뒤 “의회가 감시자 역할을 넘어 대안 제시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창수 소장은 강연을 통해 전북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채 수입 비중 감소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의존 심화 △낮은 재정자립도 △성과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북의 취약한 재정체계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재정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소장은 전북이 나아가야 할 재정 방향으로 △도정 핵심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예산 편성 △중장기와의 재정 협상력 강화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 강화 △지방자치의 예산 심사 기능 확대 등을 제시하며 “정치가 예산을 이끌어야지, 예산이 정치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특강은 의원과 사무처 직원뿐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참석해 질의응답과 의견을 나누며, 전북 재정운영의 개선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만호 기자



문승우 의장과 장연국 원내대표, 김동구 의원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2일 한국연구재단 앞에서 도의회 입장문 낭독과 피켓 시위를 벌이며, 불공정한 부지선정 결과를 규탄했다.

## “인공태양 부지선정 전면 재검토하라”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 한국연구재단 항의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문승우 의장과 장연국 원내대표, 김동구 의원 등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이날 한국연구재단 앞에서 도의회 입장문 낭독과 피켓 시위를 벌이며, 불공정한 부지선정 결과를 규탄했다. 이어 재단 측 관계자에게 항의의 서한을 전달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세만금은 공모에서 우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2027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최근

과기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부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고문상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의 우선 검토’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또 50년 임대+50년 갱신 이 가능할 뿐 아니라 5년간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겠다고 전북도가 제시한 방안조차 평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공모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으며, 재단 측에 입장문 전달을 통해 사업 선정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